

## 여성의 권익확대를 위한 과제와 방안

김 정 속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1. 21세기와 한국여성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들에 대한 교육투자 및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은 지난 30여년간 몰라보게 달라졌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외치는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그리고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들을 많이 제정하여 현재 집행중이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 및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1998-2002년)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위상을 분석해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는 많이 늘었으나 국가정책 면에서나 복지혜택의 면에서 잔여적인 범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주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 70년대의 산업화과정에서 여성들은 저임금의 산업역군으로서 경제성장의 주역을 담당해 왔으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범위는 아직까지도 하위직의 단순근로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IMF의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지난 30여년간 이루어 놓았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확대가 또다시 "여성 우선해고" 등으로 위축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또한 여성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요보호여성 위주의 최소한의 서비스로 국한되어 왔으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발전적 정책이기 보다는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급급한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여성의 위상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1998년)에 나타난 지표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HDI)에서는 174개국 중

30위, 남녀평등지수(GDI)에서는 163개국 중 37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나, 여성의 의회진출과 행정관리직에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한 여성세력화지수(GEM)에서는 102개국 중 83위에 그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sup>1)</sup> 이는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과 대등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으나 국회의원이나 공공부문의 상위직(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등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의 주류화", 즉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정책이 핵심적 주류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언되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에 들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주류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곧 다가오는 21세기는 "3F의 시대", 즉 여성(Feminine), 감성(Feeling), 가상(Fiction)의 시대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사회로 불리우는 21세기에는 여성의 섬세함과 무한한 상상력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도 활발해 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경우 여성 컴퓨터 통신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고객이 되어 그 영향력이 날로 증대해 가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여성의 PC통신 가입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가상공간을 활용한 여성의 경제활동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소비활동의 주체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을 21세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훈련시켜 산업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특히 농업여성의 경우 농산물 생산의 역군이면서도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물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주류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1)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1998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주로 국민의 교육성취도 등을 지표로 한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는 174개국 중 30위, 교육성취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반영한 남녀평등지수(GDI : 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에서는 163개국 중 37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의회진출과 행정관리직에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한 여성세력화지수(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는 102개국 중 83위에 그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1998).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과정을 짚어보고 현 여성정책의 문제점에 비추어 21세기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하고자 하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과 여성의 위상

### (1) 한국여성정책의 발전과정

한국사회에서 여성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아래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라고 하겠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부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녀의 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 정책들은 8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화되었으며,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들도 이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즉, 1983년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고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88년에는 행정부의 여성전담기구로 정무장관(제2)실이 신설되었으며, 1994년에는 국회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어 입법부에도 여성전담기구가 만들어졌다.

한편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업무 관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행정부의 여성관련 전담부처인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소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상을 한단계 높이도록 하였으며, 노동부의 근로여성 관련부서 이외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5개부처의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여성관련 조직개편은 실제적으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되기도 하나 여성정책을 총괄하게 되어있는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집행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으로만 되어 있어 오히려 기존의 정무장관(제2)실보다 위상이 저하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농림부와 같이 여성에 대해 무관심하던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둔 것은 여성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하겠다.

행정부의 여성관련 전담기구의 정비와 더불어 공히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87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에 여성부문이 포함된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이에 맞추어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민법(가족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성폭력특별법]·[여성발전기본법]·[가정폭력방지법]·[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법제도상의 결실이 맺어짐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정책은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특히 북경여성대회(1995년)를 계기로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인식이 새롭게 환기된 가운데 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여성정책은 한단계 도약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여성정책의 방향이 기존의 요보호여성을 위한 부녀복지정책에서 보편적인 여성복지 개념으로 전환되었고,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여성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게 되는 등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에 근거하여 '9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년~2002년)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여성정책이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된 데에는 유엔의 영향이 크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설정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각국의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현재 163개국에 비준하고 있으며, 한국은 1984년 12월 27일 비준서를 기탁하고 1985년 1월 7일 공포하여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간존엄에 위배되고 사회와 가족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이며, 모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자녀양육은 남녀 그리고 사회전체가 함께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기본인식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제거를 위해 체약국으로 하여금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의거하여 법률의 제·개정, 여성업무 전담기구의 설치 등 괄목할 만한 조치들을 취하여 온 것이다.

## (2) 한국여성정책의 기본 방향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여성정책의 목표는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추구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다양한 여성복지서비스의 확충>,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여성정책이 크게 달라진 점은 그동안 요보호여성 중심의 최소한의 복지정책에서 이제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실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본계획의 20대 정책과제에는 "여성농어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이 선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 완화, 지역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조직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직 5개년 계획의 2차년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는 하나,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 (3) 한국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문제점

한국여성의 사회적 위상은 지난 30여년 사이에 급속한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국가정책적 관심은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었으나 실제 여성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부터 추진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라고 하겠다.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한 소수자녀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여성들의 삶의 주기가 상당히 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가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년대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963년 37.0%에서 1980년에 42.8%, 1997년에는 49.5%에 달하고 있으며<sup>2)</sup>, 특히 기혼 여성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도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2) 한국여성개발원(1999), [1998 여성통계연보].

63.1%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여성의 직업분포가 전문행정직 보다는 서비스와 판매직(34.3%), 사무직(15.9%) 등 소득이 적고 승진 기회가 희박하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고학력여성의 참가율이 오히려 낮아 여성의 교육투자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별·학력별 임금격차는 아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7년도 현재 전 직종에 걸쳐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평균 61%정도밖에 안되며, 특히 농업업 숙련근로자의 경우는 남성임금의 48.9%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부문에서 성차가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다.<sup>3)</sup>

여성의 지위 향상이 가장 저조한 분야는 정치 및 공공부문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을 보면 입법부의 경우 현재 전체 국회의원 299명중 여성국회의원은 11명(3.7%)이며, 행정부에서는 17개부처 장관 중 여성장관은 환경부장관 1명과 장관급 1명(대통령소속 여성특위 위원장)에 불과하며 차관 중 여성은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87위로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세계 평균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12.3%이며,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평균 35.9%,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비율도 13.9%나 되기 때문에<sup>4)</sup> 상대적으로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저조한가를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가장 부진한 이유는 이제까지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여성들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나 정당운영이 남성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데 있어서나, 투표에 의한 선출방식 등이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데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정책이 바로 정치부문에서 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할수록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하겠다.

여성의 희귀현상은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3.0%, 정책결정직이라고 볼 수 있는 3급이상에서 여성의

3) 한국여성개발원(1999), [1998 여성통계연보].

4) 1998년 3월 현재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자료임.

비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며, 심지어 여성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급까지 남성들이 맡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여성들이 관료사회에의 진출을 기피해 왔었다는 점도 있으나 유능한 여성들을 승진상의 불이익 등으로 조직에서 키우지 않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남성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관료사회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근 추진중인 개방형 임용제도와 승진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은 대부분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수준은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론가나 여성운동가 등 여성문제 전문가의 개입은 거의 차단되어 있다. 물론 여성참여가 저조한 것은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발전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그리고 여성의 교육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지적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수준을 나타내는 관련지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여성의 정책결정직에서의 참여수준 >

주요 지표명	1985	1990	1993	1995	1998*
○ 여성장관비율	4.3	4.2	12.5	5.0	5.8
○ 5급이상공무원 중 여성비율	0.5	1.9	1.7	2.8	3.0
○ 여성 국회의원비율	2.9	1.3(92)	2.0(94)	3.0(96)	3.7
○ 정부각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2	5.5	6.1	7.7	10.0

(출처 :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 1998년도 자료는 관련부처의 자료에 근거함)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의 참여수준은 지난 10여년간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대부분 10%미만에 불과하여 여성을 위한 정책결정에 여성들이 거의 배제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때로는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권익향상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설정되기도 하며, 또는 여성들의 요구를 외형상 충족시켜주기 위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수립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진정 여성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문제들은 관심밖으로 보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진정한 여성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성정책이 모든 부문에서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정치, 공공부문 등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일정 수준까지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여성할당제(잠정적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잠정적 우대조치의 실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성차별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정치, 공공부문 등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농업부문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문제점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우리 농업의 주변인에서부터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전종철, 1999). 즉, 여성농업인들이 이제는 농업전문경영인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작목과 농업경영 기법의 개발, 농산물 가공산업체의 창업 경영 등에 참여함으로써 21세기 신지식농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이다. 과연 여성농업인의 실태는 어떠한가?

먼저 우리나라의 총 농업종사자중 여성의 비율을 보면 '70년대나 오늘날이나 큰 변화는 없다. 1970년말 총 농업종사자 수 749만7천명중 여성은 383만 1천명으로 51.1%였으며, '97년말에는 총 농업종사자 326만5천명중 여성은 166만1천명으로 50.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숫자는 27년사이에 절반이하로 크게 줄었으나 여성의 구성비는 0.2%가 감소하는 수준에 그쳐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겠다. 즉, 농업종사자의 절반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구성은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연령면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인구센서스결과에 의하면 1970~95년 기간중 15세미만 농가여성의 인구비율은 41.9%에서 13.2%로 급감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여성의 비율은 2.9%에서 17.5%로 증가하여 농가여성의 노령화를 알 수 있다(정기환, 1999). 특히 농가인구중에서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이농하기 때문에 35세미만의 여성인구는 월등히 적은 반면 35세이상의 여성인구는 남성보다 비율이 높으며, 농가여성의 90%이상이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므로<sup>5)</sup> 농업여성인의 노령화 현상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보면 1996년말 현재 총 1,316시간중 48%를 차지해 남성과 거의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숙, 1999). 농촌여성들이 농사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선희·이수애, 1994)에서도 응답자의 88.1%가 사철내내 농사일을 한다고 답하였으며, 농번기에만 하는 사람은 7.1%,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람은 3.6%,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또한 농사일의 정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83.2%가 예전과 비교하여 농사일이 늘었다고 답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역할과중을 짐작케 하고 있다.

또한 무안지역 농가의 여성노동 실태조사 결과(서선희·이수애, 1994) 여성들의 노동없이는 농가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즉, 가구별 경작규모나 생산작물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농가에서 여성들은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은 농가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농업구조가 미곡중심에서 채소나 특용작물 등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되고 기계화, 기술집약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농업참여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60년대의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농가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기계화, 규모화, 기술집약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일이 기계화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농업이 기계화가

---

5) 1997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출처 : 정기환, 1999)

되면서 성별분업은 더욱 뚜렷해져서 "기계로 하는 일"은 남자가, "손으로 하는 일"은 여자가 담당하는 형태로 이분화되어, 여성농업인의 노동은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여성의 농업참여가 확대되어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이 상호보완적이고 공생적인 모습을 띄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남성중심적인 성별분업 체계하에서 다분히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새로이 도입된 기계로 하는 일은 중요하게 보고 기존의 수작업 노동은 보조적으로 보는 인식체계하에서 여성농업인의 일에 대한 가치평가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노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남성들의 주영역이던 농사일에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성별분업이 이루어진 반면, 여성들의 주영역이던 가사일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전혀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상당량의 농사일을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전담역할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여성농업인들은 농업노동의 증가와 함께 가사노동에서도 전담자가 되어 역할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여성농업인들은 농사일과 가사일의 역할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의 일을 보조적인 노동으로 평가하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들도 역시 주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보다 농촌은 전통적으로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별 역할분담 이데올로기를 타파하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의 주류화"를 농업부문에서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잠정적 우대조치(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의 시행이 요구되며 여성을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조성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청된다.

#### 4. 여성의 권익확대를 위한 과제와 방안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전세계 여성들의 가장 큰 과제는 "여성정책의 주류화"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진정한 여성의 권익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주변인에서 벗어나 주류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여성의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어 다른 어느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여성의 구성비가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성별 역할분담체계에 의해 여성의 일이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여성의 주류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과제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성정책을 결정짓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들을 어떻게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여성 전문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적이고 성편견적인 인식체계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라고 하겠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과제별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을 정책결정과정에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잠정적 우대조치(여성할당제)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5급과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매년 목표로 하는 비율만큼(1999년은 20%가 목표임) 여성을 채용하도록 하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목표비율을 설정해 놓고 가능한한 여성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정도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잠정적 우대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참여가 목표에 도달한 후에는 우대조치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여성의 정치할당제, 여교수할당제, 여성교육행정직 할당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농업부문에서도 영농후계자 선정시 여성농업인을 일정비율 이상 할당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여성농업인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조직화하고 조직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들이 진정한 주류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부문별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전문가를 길러내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농업의 경우에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농기계작동법이나 작물관리 등의 농업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여성들이 포함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경우 대부분이 기혼여성인데도 조직부문과는 달리 취업이라는 개념이 없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과 같은 취업여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년내내 농사일을 해야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후 일정기간(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60일)을 쉴 수 있도록 도우미제도(Helper System)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의료보험에서 여성농업인의 출산휴가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성별 역할분담 이데올로기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방안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직업의식 강화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더 보수적이고 이분법적인 역할분담체계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의식전환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성의 권익확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요구하고 개선해 나아갈 때 여성의 권익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현숙(1999), "여성농업인은 전문 직업인,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농촌생활과학] 20(1), 통권77호.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88년도 시행계획].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3·4차 이행 보고서].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 방안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 서선희·이수애(1994), "농업 생산방식의 변화와 여성노동: 전남 무안지역을 중심으로", [목포대여성연구] 2집(1999.12):181-203
- 정기환(1999), "농가여성의 농업생산활동 참여실태와 지원방안", [농촌생활과학] 20(1), 통권77호.
- 정호선(1997),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지도자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 한국여성개발원(1999), [1998 여성통계연보].